유치원 특수학급, 추가 설립 유도할 계획

2023~2027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특수학급 있는 국·공·사립유치원 13.3%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원아와 비(非)장애 원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교사 수요 예측을 위해 중장기 수급 계획도 마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추진할 종합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특수학급 있는 유치원 13.3%…사립은 고작 '1곳'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2018년 9만780명에서 올해 10만3695명으로 증가 추세며, 특히 영유아 수가 같은 기간 1만7007명에서 1만9906명으로 수요가 늘어났다.

현재 특수학교는 2018년보다 19개교 늘어난 192개교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집에서 특수학교를 가는 데에만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이 전체 6.6%에 이른다.

전체 특수학교 58.3%인 112개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전공과정)까지 한 학교에서 모두 가르치는 형태인데, 이를 쪼개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를 늘린다. 정책연구를 거쳐 5년 동안 10개교를 신설한다는 목표다.

사립유치원에 특히 부족한 특수학급을 늘리고자 운영·인건비를 당국이 지원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올해 초등학교 77.1%, 중학교 61.9%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만 고등학교는 47.4%로 저조하다. 유치원은 10곳 중 1곳 남짓인 13.3% 정도만 특수학급이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1141개 중 1137개가 공립, 3개가 국립이다. 사립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전체 유치원의 40.2%가 사립유치원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다.

교육 당국은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더 늘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을 전국 8개에서 1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특수교사 수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립학교 기준 16.6%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특수학급 8.7%가 과밀 상태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그에 따른 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이 배치된 학교에 법령에 근거해 행·재정 지원을 늘린다.

그동안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특수학교·학급 외에 일반 학교, 학급에도 특수교사를 배치해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 배치 기준을 고치는 것도 검토한다.

다만, 특수교사 정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이번에는 목표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학생들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이르면 2024년부터 초·중·고에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선도 특수학교를 내년 5개교, 2027년 총 34개교 지정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정서 위기 관심군' 학생 8만4000명…"지원 강화"

교육부는 학습, 정서 등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날 회의에서 발표했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들을 전수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은 올해 전체 4.9%인 8만4858명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지난해 4.6%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관심군 학생 총 8만539명 중 5만6698명(74.4%)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관심군 비율은 4%대 후반 수준을 보였다. 2018년부터 8만7333명(4.9%)→8만7302명(4.8%)→8만4379명(4.7%)→8만539명(4.6%)→8만4858명(4.9%)다.

나은종 교육부 사회정책조정지원팀장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부총리 취임 후 현황을 공개한다"며 "데이터를 보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 체계 5개 분야 총 38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기존 선별 검사 도구를 보완한다. 내년부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개편하며,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 정부는 '비대면 정서장애 디지털 관리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용 콘텐츠를 개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끈다.

학교에서는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사 멘토링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들 1~3명과 짝지어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토닥토닥 키다리샘'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확대한다.

가칭 '학생성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경제, 가정적 요인이나 기초학력 부진 등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데, 원인과 상관 없이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경계선 지능'으로 알려진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은둔형 외톨이,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도 조사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본인 동의 등 다른 절차 없이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넘어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재환 기자

'찾아가는 나눔카페 많이 찾아 주세요~' 이경우(뒷줄 오른쪽부터) 휘슬러코리아 대표와 장만희 한국구세군 사령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나눔카페 전달식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 부주의' 고흥 주택서 불

한밤중 고흥의 한 주택에서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나 수 천만 원 대 피해가 났다.

28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36분께 고흥군 동강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64㎡)와 창고 1채(15㎡)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1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관 34명, 장비 12대를 투입해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주인이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주고법 "주식 명의신탁 유효·실질과세 원칙 따라야"

명의신탁 해제 뒤 100% 소유…과점 주주 취득세 부과

회사 설립자가 주식 일부를 직원들 명의로 해뒀다가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법원은 설립자가 원래부터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산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6월 자본금 1억원을 출연해 금속도장 제조·판매 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A씨는 회사 발행 주식 1만 주 중 45%(4500주)를 자기 명의로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나머지 주식 30%·25%를 직원 B·C씨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렸다.

2003년 3월 C씨가 퇴사하면서 보유 주식 25%를 다른 직원 D씨에게 이전했다.

A씨는 2017년 8월 B·D씨가 소유한 주식(55%)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했다. 2018년 12월 주주 명부에서 55%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전환, 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했다.

광산구는 A씨가 회사 주식 절반 이상을 소유(45%→100%)하는 과점 주주가 됐는데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봤다. 광산구는 2020년 9월 A씨에게 취득세 1억 79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897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과점 주주였다. 직원들 명의만 빌려 주식 일부를 등재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해 주식 100%를 보유한 만큼, 실질적인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다. 지분 비율 증가를 전제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B·C·D씨가 대금 지급과 배당금 수령 없이 단순히 A씨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점, A씨가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봤다.

회사 설립 당시 A씨의 주식 소유 비율과 2018년 12월 A씨가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점 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사실상 100%로 동일한데도 A씨의 주식 비율이 증가해 과점 주주가 됐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1심은 "실질 과세 원칙은 소득·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도 준용된다"며 "취득세 납부 의무는 주주 명의가 아니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형택 기자

광주 동부소방, 겨울철 무등산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27일 무등산 일대에서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119 시민산악봉사대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슬비기자

광양소방, 산림인접마을 보일러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자율특수시책의 일환으로 24일, 25일 이틀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산림인접마을 보일러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진도소방, 진도초교 119안전 체험 한마당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 지난 22일,23일 이틀간 진도서초등학교 등 4개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19안전체험 한마당을 운영 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소방, 여수동동북축제 안전관리 빛나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26일 여수동동북축제에서 발 빠른 현장 대처로 위급상황에 놓인 70대 여성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완도해경,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 지휘관 치안현장 점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24일, 회진 및 마량파출소에서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휘관 치안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서-동신대학교, 경·학 학점제 수료식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최근 22일 '경학 실습 학점제' 제7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12명의 수료식을 개최 하였다.

나주=송준표 기자